

여성사 관련 자료의 보존현황과 관리방안:

해방이후 ~ 1980년대 여성정책 및 여성단체 자료를 중심으로*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terials of Women's History:
On the Materials of Women's Policies and of Women's Organizations
from 1945 to 1980's

백 영 주(Young-Joo Paik)**

김 수 자(Soo-Ja Kim)***

목 차

- | | |
|---------------------------|------------------------------|
| 1. 머리말 | 3.2 여성단체 활동사 관련 자료의 보존 현황 |
| 2. 여성정책 및 단체 활동의 역사 | 4. 여성사 관련 자료의 보존 방안 |
| 2.1 해방이후 - 1980년대 여성정책 변화 | 4.1 여성관련 자료 수집 및 관리 담당기관의 설치 |
| 2.2 여성단체의 활동사 | 4.2 여성사 관련 자료의 DB 구축 |
| 3. 여성사 관련 자료의 보존 현황 | 5. 맺음말 |
| 3.1 여성정책사 관련 자료의 보존 현황 | |

<초 록>

해방이후 여성사 관련 여성정책 및 단체활동 관련 기록물의 종류에는 회의록 등을 포함한 문서류, 팸플렛, 교육 자료집, 서적, 정기간행물, 사진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이들 자료들의 보존 상태는 매우 취약하다. 이는 자료 담당자의 부재와 보존 공간의 협소함, 재정의 부족 등의 원인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자료의 수집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로서의 자료관을 설치하는 것이다. 또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DB화 함으로써 전문연구자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웹서비스를 통하여 쉽게 한국여성사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제어: 여성정책사, 여성단체 활동사, 여성사 자료관, 아키비스트, 자료의 디지털화

<ABSTRACT>

As records of Women's policies and organizations from 1945, there are reports, pamphlet, educational materials, books, and photos. At this time, preservation status of which is so vulnerable. These problems are caused by absence of archivist, small preservation space, and financial weakness. For solving these problems, an alternative is establishing archives specified at collecting and management of materials.

It's more important to making database through systemized materials, so that general people also beyond professional researcher, by web server, easily access to information of Korean Women's history.

Key words: history of women's policies, history of women's organizations, archives for women's history, archivist, digitalization of materials

*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한국여성개발원 기획조정실 실장(yjpaik@kwdi.re.kr)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soo4505@hanmail.net)

1. 머리말

여성사 관련 기록물은 여성의 역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으며, 여성의 역사는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는 인간 전체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관련 기록들의 수집 및 관리는 기록을 통해 역사 속에서 여성을 포함한 인간사의 뿌리를 찾고 재해석하며 보다 발전적인 현재와 미래의 인간상을 정립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여성사 관련 기록의 관리, 보존 및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국 여성사 연구의 기본이 되는 여성사 관련 서지도 미흡한 실정이다.

해방이후 1980년대까지 여성정책 및 여성단체 활동 관련 기록물들은 정책이나 단체의 활동이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제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태에서나마 남아있는 자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수집하여 더 이상의 자료 유실을 방지하고, 앞으로 생산될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정부가 여성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과 관련하여 취하는 행정적 조치나 방침'으로 광범위하게 여성정책을 정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1988년 이전에 중앙정부가 생산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 상태를 파악한 것이다. 이에 여성정책 수행기관과 정부가 생산한 공문서가 많이 소장되어 있는 국가기록원 및 국내 주요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

시하였다.¹⁾

여성정책 관련 기록물과 마찬가지로 여성단체 활동 기록물들도 해방이후부터 1980년대 후반에 설립된 단체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자료 및 보존 상태를 파악하였다. 그러므로 여성단체의 주 대상은 1950년대 창립된 대한부인회, 한국여학사협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여성단체협의회 소속의 단체들과 1980년대 창립된 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과 같은 여성단체연합 소속의 단체들이다. 그러나 자료 수집과 보존의 상태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여성단체협의회 소속단체들이 주 대상이 되었다. 이는 이들 단체들의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자료 및 보존 상태 파악의 필요성이 더욱 시급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본 논문은 여성정책 관련 기구와 여성단체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유형과 보존상태를 서술하고 유실되어 가고 있는 자료들의 보존 방안을 대략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여성정책 및 여성단체 활동의 역사

2.1 해방이후 - 1980년대 여성정책 변화

대한민국의 여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된 것은 1946년 미군정 법령 제 107호 「부녀국 설치령」을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이 법령에 의해 여성정책 담당 기구로 부녀국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진정한 의

1) 여성정책 관련 자료의 조사는 2003년도 여성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실시했던 여성정책 사료 체계화방안을 기본으로 하였다. 당시 조사한 기관은 여성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미군정기 부녀국에서 보건사회부, 농촌진흥청, 공보처, 대한가족계획협회, 한국여성개발원, 새마을 관련기관 등이었다. 그리고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및 각 대학 도서관들도 조사하여 자료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였다.

미의 여성정책의 실시는 1983년 여성정책전담 연구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이 만들어지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88년 국가차원의 여성정책 기구인 정무장관(제2)실이 설치되면서 행정적 의미의 여성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여성정책은 초기에는 부녀행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그 적용 대상이나 사업 내용의 폭 또한 매우 좁았다. 그러나 여성정책이란 사회적으로 여성이 열악한 지위에 처해 있어 감내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여 보편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라 할 수 있다. 즉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남녀는 평등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하에 국가가 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불평등한 상황 하에서 여성들이 감수하고 있는 불이익에 대해 국가가 일차적 책임을 짐으로써 여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 계획이라 할 수 있다(권영자, 1995). 그러므로 여성정책의 지향점은 여성의 요구를 수용, 궁극적으로는 평등사회를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48년 해방에서 전두환정권까지는 여성정책에 있어서는 준비기라 할 수 있다. 미군정기에 마련된 여성관련 정책들은 60·70년대 박정희정권 때까지 그대로 계승되었다. 그리고 70년대부터 80년대의 여성관련 정책의 내용 또한 여성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소극적인 정책 이상의 것을 갖지 못하였다.

여성정책의 내용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즉 1983년 한

국여성개발원이 개원하면서 여성관련 자료가 한곳에 수집되고, 1985년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여성발전에 대한 중점연구가 지원되는 등의 계획 등이 이루어지면서 여성발전기 본계획, 남녀차별개선 등으로 여성정책의 의미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전경옥, 2003, 3-4).

미군정기부터 1980년대까지 여성정책 시행 기구에서 실시한 여성정책의 내용을 시대변화에 따라 네 시기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보건사회부, 1987, 243-254). 첫 번째 시기는 해방이후부터 1950년 6·25전쟁 전까지 계몽위주기이다. 두 번째 시기는 전쟁이후부터 1960년까지로 전재여성보호기이다. 세 번째 시기는 1960년부터 1970년까지 요보호여성선도위주기이다. 그리고 네 번째 시기는 1971년부터 1985년까지 가정복지위주의 역점사업전환기이다. 마지막으로 1985년 이후는 여성정책전담 부처가 설치되면서 여성해방 또는 여성평등을 지향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시기로 할 수 있다.²⁾ 그리고 이 시기에 들어 진정한 의미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책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와같이 80년대 이전의 여성정책은 대부분 특정 보호대상 여성만이 대상이 되어 그 내용도 주로 소극적 차원의 치유적 목표에 한정되었으나, 80년대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 촉진이나 남녀평등의 구현 등이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게다가 보호정책의 경우도 매매춘여성이나 빈곤여성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여성 등으로 그 대상 범

2) 이러한 시기 구분 외에도 여성발전 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1980년대 전반까지를 여성발전의 준비기,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까지를 통합기, 2000년대까지를 정착기로 나누기도 한다(전경옥, 2003, 3).

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김복규, 2000, 2).

여성정책은 그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합목적형' 정책과 '수단형' 정책으로 구별된다. '합목적형' 여성정책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같은 여성의 여건 개선이나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단형' 여성정책은 국가의 다른 목적에 여성을 동원하는 것이다. 즉 수단형 여성정책은 국가가 어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성에게 별도로 특별하게 요구하는 정책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가경쟁력 강화라든가, 경제발전, 인구억제 또는 출산 장려정책 등이 이에 해당한다(여성부, 2003, 19).

미군정기에 설치된 부녀국에서는 여성의 사회, 경제, 정치 및 문화적 생활개선, 복지향상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부녀노동 조건 개선, 직장 및 가정에서의 부녀의 복지, 관청사무, 보건, 참정권, 윤락녀의 취체와 그 제도의 폐지, 불량부녀와 형제부녀보호 등의 기능과 임무를 담당하였다(정현주, 2004, 12).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녀국에서 실시한 주된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관련된 5·10 총선거와 관련된 홍보와 부녀 계몽이었다. 왜냐하면 미군정은 대한민

국 건설의 요체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탄생한 민주주의 국가임을 강조하기 위해 선거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미군정기의 계몽 위주의 여성정책의 내용은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의 발발은 여성정책의 내용을 변화시켰다. 이후 여성정책의 주 내용은 전재민보호사업의 하나였던 전재미망인 구호사업이었다. 이와 같이 미군정기부터 대한민국정부수립 초기라 할 수 있는 제1공화국시기 여성정책은 주로 여성을 계몽과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1962년부터 국가주도로 시작된 가족계획운동은 국가 정책의 실현을 위해 여성을 수단화한 대표적인 '수단형' 여성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실시된 가족계획 정책은 인구증가의 억제가 목적이었으므로 피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주내용을 이루었으며 그 대상은 남성보다는 여성에 치중되는 면이 강하였다. 1968년부터는 마을 단위로 가족계획어머니회가 조직되어 가족계획의 선전, 피임지식의 교육, 피임기구 공급 등의 활동을 해나갔다. 가족계획의 결과 여성들

〈표 1〉 여성정책의 유형 및 그 내용(미군정기-1980년대)

시기	여성정책 유형	여성정책 주 내용
해방이후	부녀지도사업	부녀계몽 및 교육/ 여성단체육성 지원/부녀새마을사업/생활개선/여성 활동지원
전쟁이후	부녀보호사업	전재미망인구호사업/요보호여성사업(모자세대, 윤락여성, 미혼모, 영세여성 등)/ 부녀상담 및 부녀직업보도
1960년대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1970년대	근로여성사업	근로여성사업
1970년대	농촌생활개선사업	농촌생활개선사업
1980년대	평등정책	여성의 지위향상, 남녀평등

은 출산과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힐 수 있었으나, 당시 가족계획은 여성위주의 피임을 주 정책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것은 여성에게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주기도 하였다.

여성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여성운동이 활성화되는 시기는 독자적 여성운동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1970년대 들어서면서였다. 이 시기에는 수출지상주의의 정책으로 여성노동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여성노동자의 의식성장과 격렬한 노동운동을 낳았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시책에 따라 새마을 부녀운동이 펼쳐지기도 하였다.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정권이 주도한 농촌근대화운동이었다. 여기에 농촌여성들이 참여하면서 여성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여성들은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담당하고 마을 공공사업에도 참여하였으며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특수작물재배도 담당하였다. 이 시기 여성들은 새마을부녀회를 통해 조직 활동을 하고 지도활동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발언권을 키워나갔다.

1980년대 여성정책 및 여성운동의 내용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70년대에 축적된 여성문제의 인식과 운동의 기반위에서 여성들은 사회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이들은 여성문제를 전체 사회 구조의 모순으로 보면서 총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구속자석방운동, 최루탄추방운동과 같이 민주화운동을 전개하는가 하면 여성의 독자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와같은 여성운동의 발전과 여성의식의 성장은 여성정책에도 변화를 주었다. 이 시기 여성정책담당부서 설치

는 이러한 여성운동 및 의식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이 여성정책의 내용은 시기별로 국가정책의 큰 틀에서 나름의 특성을 지니며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정책 내용의 질적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즉 여성의 정치나 사회 참여 등에 있어서의 불평등성은 그대로 유지된 채 여성을 국가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한 면이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의 의식성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으며 또한 이것이 여성단체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2.2 여성단체의 활동사

해방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 여성단체들은 대체로 정부 당국의 정책에 호응하며 그 활동을 전개시켜 나갔기 때문에 이 시기 여성정책과 여성단체 활동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60, 70년대는 정부 당국이 여성정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를 결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 여성단체들의 활동은 정부 정책을 실행해 옮기는 단체임과 동시에 여성과 관련된 활동도 전개시키는 등의 이중의 역할을 담당해야만 했다. 그러나 비록 1960년대 결성되었거나 활동하였던 여성단체가 관변단체라 할지라도 국가정책 수행에만 전념한 것은 아니었다. 일례로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여성단체는 가족법 개정운동과 생활개선운동 등을 전개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1970년대에는 정부의 여성정책에 반대

하는 여성운동 단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특히 당시 증가하고 있던 여성노동자들의 의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1970년대 결성된 여성노동자협의회는 정부의 노동정책과 자본가를 상대로 여성노동자 권의 향상을 위한 활동을 전개시키기도 하였다.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대중적인 성격을 지닌 여성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성장하여 여성권익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들어서였다. 이 시기에 결성된 단체들 중에는 친정부적 활동의 여성단체도 있었지만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여성 권의 향상과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변화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미군정기부터 제1공화국 시기 가장 대표적이었던 여성단체로는 대한부인회, 대한여학사협회, 가정법률상담소 등을 꼽을 수 있다. 대한부인회는 1948년 정부수립 직전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반공교육과 선전에 힘을 기울였고, 친여, 친이승만 성격을 강하게 띤 이 시기 대표적인 관변단체였다. 5.16쿠데타 이후 정당과 사회단체 해체 시 함께 해체되었다가 1963년 한국부인회로 재결성되었다. 그 후 이 단체는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여 여러 분야에서 남녀평등을 이룩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로 복지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대한여학사협회는 1950년 초대회장인 김활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다. 교육받은 여성이 앞장서서, 남성과 대등하게 활동하도록 이끌며, 배움에 보답하기 위해 사회에 봉사하고 공헌하고자 하는 것이 창립 이념이다.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교육수준을 높이고 국제여학사협회와의 유대를 강화하여 국제화, 세계화의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하며 활동하고 있다.

1950년대 전후로 만들어진 대한여학사협회, 여성문제연구원, 대한부인회 등 8개 단체들은 1959년 연대하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를 결성하였다. 여협의 결성 목적은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한다는 것이었다. 여협은 1960년에 세계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하였고 가족법 개정 운동을 비롯한 법제도 개선 활동을 전개하였다.

〈표 2〉 제1공화국 시기 활동하던 대표적인 여성단체(여협 산하단체 중심)

단체명	창립년도	초대회장	비고
대한기독교여자청년회(YWCA)	1922	김활란	
대한부인회	1948	박순천 임영신	한국부인회로 개칭
대한여학사협회	1950	김활란	한국여학사협회로 개칭
대한어머니회	1958	고향경	
여성문제연구원	1952	황신덕	
가정법률상담소	1956	이태영	여성문제연구회에서 분화
중앙부인회	1953	송효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959	김활란	당시 여성단체들의 협의회 형식 씬

그리고 현재까지도 소비자 보호운동과 마스크 모니터활동과 국내 및 국제여성단체 교류협력 사업과 사회복지사업, 여성의 취업기회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협의 정책 지원 활동 외에 여성의 권익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활동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가족법 개정운동이었다. 여성단체들은 이미 1953년 8개 여성단체가 연합하여 '여성단체의 민법제정에 관한 건의서'를 법전편찬위원회에 제출하고 호주권, 친권, 재산상속, 혼인관계 등에서 남녀평등을 요구하였다. 이런 활동은 1956년 이태영에 의해 설립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1972년에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YWCA 및 가정법률상담소가 공동으로 가족법개정촉구 강연회를 개최하고 범여성 가족법개정추진회를 결성함으로써 가족법의 민주화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여성단체들은 호주제의 폐지, 친족범위 결정에서의 남녀평등, 동성동본불혼제의 폐지 등 10개 요구를 내세우며 가족법개정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갔다.

이러한 가족법 개정운동은 1989년 개정된 가족법에 영향을 주었다. 즉 호주제 폐지와 동성동본불혼제 폐지와 같은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여전히 남성중심적인 호주승계순위와 호적편제, 성씨제도 등이 문제로 남아 있지만, 그래도 개정된 가족법에서는 호주의 권리 의무 조항이 대폭 삭제되었고, 친족범위가 부계 모계 모두 8촌까지로 조정되었다. 그리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대 여성단체의 활동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이 결성되었다. 여연은 기존의 여협의 관변성, 보수성, 그리

고 비활동성을 비난하며 여협과 차별화를 두고자 하였다. 여연은 "민주화, 자유화, 여성해방의 쟁취"를 목표로 1987년에 창립되었다. 그리고 권인숙 성고문 사건의 대책활동을 계기로 21개 여성단체가 연합하였다. 1989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정점으로 민족민주운동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여연은 변혁적, 총체적 전망을 견지하되 여성의 독자성을 강화하여 운동의 영역을 확대하고 다변화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그 지향점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여성운동의 대중화와 지역화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여성관련법, 제도 개선운동 전개 사업에 주력하였다.

현재 여연은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의 27개 회원단체가 있다.

민우회는 "여성의 진보없이 사회변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1983년 결성된 여성평우회를 전신으로 하여 87년에 창립되었다. 민우회는 대중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성운동 조직을 표방하며 노동, 환경, 생활협동조합 등의 운동을 전개하며, 다른 한편으로 참교육을 위한 활동,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운동, 직장내 폭력추방운동, 미디어 선거 보도 감시활동, 가족법 개정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여연 소속의 대표적인 단체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여성의전화로 시작된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을 들 수 있다. 여성의전화는 여성인권운동단체로 가정폭력문제를 사회문제화 하고, 피해자를 위한 상담을 통해 심리적, 법률적,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1987년에는 쉼터를 최초로 개설하고 직장내 여성차별문제 및 성폭력 상담을 위한 여성문제 고발 창구를 개설하였다.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제정

〈표 3〉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대표적인 회원 단체(1980년대 및 90년대 초 창립)

단체명	창립연도	초대회장	비고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1983	김희선	한국여성의 전화 후신
기독교여성회	1986	서순화	초대 임원진: 조화순, 손은하
한국여성민우회	1987	이효재	한명숙, 이경숙 등 참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1989	고송자	박현숙, 한명자, 서옥례
한국여성연구회	1989	정현백, 강이수	여성과 사회 정간물 발간
한국성폭력상담소	1991	최영애, 이미경	
한국여성노동자회 협의회	1992	이철순	

자료: 한국여성단체연합, 1998, 열린희망, 한국여성단체연합 10년사

운동, 미혼모의 양육권, 여성장애인 성폭력사건 등 여성인권사안의 지원, 성교육, 부부재산 공동명의운동, 미디어운동, 지역운동에 주력하고 있다.

3. 여성사 관련 자료의 보존 현황

3.1 여성정책사 관련 자료의 유형 및 보존 현황

여성정책 사료는 '과거의 여성정책을 재구성 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유무형 자료'라 할 수 있다. 정부의 공문서는 물론 정부의 정책을 보도한 신문자료, 각종 법률 관련 자료, 행정기구 등의 제도 또한 정책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구술자료, 각종 간행물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여성정책의 유형은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크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부녀지도사업, 부녀보호사업, 근로여성사업, 농촌생활개선사

업,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평등정책이 그것이다.³⁾ 미군정기 부녀국이 지도과와 보호과를 설치한 이래 부녀지도사업은 '일반여성 대상의 의식주 생활개선을 포함한 지도와 교양에 관한 사항'을 말하는 것이고, 부녀보호사업은 '요보호 여성에 대한 보호와 그 시설에 관한 사항'을 의미한다. 그리고 농촌생활개선사업,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60년대 이후이다. 그리고 근로여성사업의 필요성이 인정 채택된 것은 70년대 이후이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평등을 목표로 하는 평등정책은 주로 1980년대 여성정책전담국가기구들이 설치되면서 입안, 집행되었다. 여성정책의 내용을 수행하는 중앙정부와 정부출연기관 등이 생산한 각종 유무형의 정책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각 시대에 생산된 1·2 차 사료의 보존 양과 관리 상태를 조사한 결과는 심각하였다.

미군정기부터 1980년대까지 여성정책은 다른 정부정책과 달리 여성의 '삶', '가정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많이 전개하였다. 따라서 간단

3) 여성정책의 내용은 정책의 목표 집단에 따라 노인여성정책, 일반여성정책, 청소년정책, 대졸여성정책, 근로여성정책, 요보호여성정책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정책의 범주에 따라 고용평등정책, 여성복지정책, 성평등정책, 여성 사회교육정책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여성부, 2003, 10.

한 시청각 자료의 역할을 하였던 팸플렛, 교육 자료집, 캠페인 용품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여성의 문자 해독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자 해독률이 남성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실시한 경우 정부는 글자 중심의 자료, 책자들 보다는 그림, 포스터, 사진이 많이 포함된 시청각 자료를 많이 활용하였다. 그러므로 정부의 여성정책 시행은 항상 여성계몽활동과 동시에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다(김수자 1999). 그러나 이들 시청각 자료들의 유실은 심각하여 현재 국가기록원에 소량이 존재할 뿐이다. 미군정기 부녀국에서 대량으로 배포한 선거관련 홍보책자 및 팸플렛, 비디오 자료의 보존은 소량에 불과하다.

그리고 미군정기 이후 시청각자료를 자료 생산기관별로 볼 때 공보처(문화공보부)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그 내용은 국가기록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대통령 수행 각종행사를 기록한 시청각 자료의 비중이 컸다. 다음은 가족계획관련 시청각 자료였다. 이것은 정부에서 직접 생산한 자료이기 보다는 가족계획협회 등 유관기관의 자료다. 그리고 농촌생활개선을 담당했던 농촌진흥청, 여성정책전담기관으로 활동한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정책담당부서였던 보건사회부가

각각 시청각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외에도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와 농협 등 여성정책의 보조기관의 역할을 담당한 곳의 시청각자료들은 현재 거의 보존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유는 기구 축소와 사무실 이전과정에서 자료실이 폐쇄되어 많은 자료들이 유실되었기 때문이다.

여성관련 시청각 자료 외에 여성정책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문서의 보존 현황 및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정책 관련 자료는 해방이후 최근까지 여성정책 자체가 '주변화'되어 있어 자료관리에 소홀하였다. 그나마도 행사위주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록을 등한시한 측면이 강하였다. 여성정책관련 자료의 관리 담당부서로 꼽을 수 있는 곳은 여성부,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여성정책 수행 정부부처 자료실은 여러 번의 기구개편과 사무실 이전, 담당자의 전보 등으로 인하여 1차 사료는 물론 간행물조차 최근의 것 이외에는 거의 보관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현재까지도 여성정책 수행부서들이 공문서는 물론 정부간행물 등 과거의 자료를 거의 보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표 4〉 자료생산기관별 자료 분포

기관 분류	여성정책 관련 기관	자료유형
정부기관	보건사회부 농촌진흥청 공보처(문화공보부)	발간물 발간물 발간물, 포스터, 팸플렛, 사진
유관기관	가족계획관련기관 한국여성개발원 새마을관련기관	포스터, 팸플렛, 발간물, 정간물 발간물, 정간물 팸플렛, 발간물, 회지, 신문

그러므로 이들 정부 부처의 자료를 이관 받아 보관하기로 되어 있는 국가기록원에도 관련 자료들은 보존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1960년대 2차체에 걸친 대대적인 문서정리 사업으로 인해 대량의 문서들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 관련 자료들은 문서의 목록조차 알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다.⁴⁾

그러므로 오히려 여성정책 관련 자료들은 문서를 생산해 낸 담당부서에 그 기록 보존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에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주요 대학 도서관을 조사하여 그 보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자료들은 주로 정부간행물 및 단행본 등으로 2차자료의 성격이 강한 것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간행물, 단행본 등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재가공 되었기 때문에 1차자료로서의 성격은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여성정책 기구의 생산 문서의 부재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중요한 이

유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의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잦은 기구개편과 사무실 이전, 담당자들의 전보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문서의 경우 보존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거나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9년 이전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것과 연관이 있다. 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관되지 않은 문서들은 대부분 시간이 경과한 뒤 유실되거나 폐기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담당자들이 자료 보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함과 동시에 '과실(過失)의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태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까지 소량 보존되어 있는 여성정책 문서와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열람의 문제이다. 문서의 열람, 자료에 대한 접근은 정부의 정책 시행과 관련하여서만 살펴봐도 행정의 발전과 정책의 투명성 확보라는 점에 있어 중요하다. 즉 과거의 기록들은 정부가

〈표 5〉 국가기록원, 국립도서관 등에 보존되어 있는 여성정책 관련 자료유형

기 관	자료 유형
국가기록원	문서와 시청각 자료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전반적인 정책관련 간행물
여성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농촌진흥청	발간물, 정간물 위주로 기록관리
농협중앙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대한가족보건협회, 기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한가족보건협회를 제외하고, 간행물 위주의 목록 관리

4) 문서의 대량 폐기를 가지고 왔던 문서정리 사업은 1962년과 1968년에 이루어졌다. 1962년 내각사무처의 '보존문서정리계획'과 1968년 총무처의 '보존문서정리계획'이 그것이다. 이들 범위 시행 과정에서 5·16 이후 보존가치가 없어진 문서에 대한 대대적인 폐기가 이루어졌다. 1962년의 법률 규정의 목적은 "시효가 경과된 채 누적되어 있는 각 행정기관의 잡다한 각종 보존 문서를 정리케하고 그 보존방법과 관리를 통일성 있게 규정함으로써 보존문서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1968년의 규정은 '각급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1968년 4월 1일 현재 보존문서를 일제히 재정리함으로써 화재 등 기타 비상시에 대비'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1960년대의 두차례의 문서관련 법규의 시행은 문서보존의 효율성을 이유로 대량의 문서 폐기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이경용, 2003, 694-699.

정책 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계획의 수립을 위해 과거의 선례나 경험을 참고한다거나, 일상적인 업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록의 부재는 어떤 면에서 '정보의 부재'와 직결된다. 이것은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 인력과 시간 및 경비의 낭비, 행정업무의 비능률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최유성 1996, 13).

그러나 현재 국가기록원의 자료 접근은 용이하지 않다. 이것은 검색시스템의 불완전성이 그 원인이다. 그러므로 여성관련 자료가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을 수 있을 지라도 그것이 열람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여성정책 관련 자료는 국가기록원 검색에서 나온 공문서, 시청각 자료와 각종 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정부간행물이 조사 자료에 해당된다. 그리고 여성정책 유관기관이라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였던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 2 여성단체 활동사 관련 자료의 보존 현황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 대한민국의 여성단체 활동은 정부 정책에 '추종'하거나, '동원'되는 등

관변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 여성단체 활동은 정부의 여성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여성단체의 활동을 통해 여성정책을 엿볼 수도 있다. 여성단체 활동사 자료에는 각 여성단체에서 생산한 업무일지, 회의록, 정기총회 보고서 및 팸플렛, 자료집, 단행본, 연속정기간행물, 녹음자료, 비디오 테이프, 사진 앨범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각 여성단체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알리기 위한 소식지 형태의 회지를 발간하였다. 이 회지의 주 배포대상은 단체 회원들이었다. 소식지와는 다른 성격을 띠는 정간물 형태의 간행물은 1달에 한번 아니면 1년에 1번씩은 간행되었다. 그리고 회원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 단체들은 교육 자료집 등이 발간되었다. 이외에도 각 단체들은 여러 종류의 서적들을 발간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각종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 실시, 행사와 관련하여 소개 팸플렛과 작은 소책자 형태의 브로셔들을 찍어냈다.

여성단체의 자료 보존 현황을 파악해 볼 때 보존되고 있는 여러 자료 유형 중 연속정기간행물이 그 보존상태가 제일 양호하며, 지속적으로 보존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정기적으로 간행

〈표 6〉 보존되고 있는 여성단체 정기간행물(창간호 및 해방이후 자료 중심)

단체	잡지명(창간호)	보존하고 있는 最古 연도	비고
대한 YWCA	YWCA 월간 50호 YWCA 청소년	1956 1975	YWCA 잡지는 일제시대에도 발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상담 1	1981	
한국부인회	소비자보호 1	1967	
한국여학사협회	협회소식 100호	1988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 1 The Woman 1	1964 1965	

되기 때문에 앞의 호들과의 지속성 때문에 계속해서 단체에서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이들 정기간행물들은 다른 자료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단체의 활동사, 변천사를 시청각적으로나 문서상으로 보여주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보존에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여성단체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체 정기간행물 중 오래된 것은 1948년 YWCA에서 발간한 YWCA 월간이다. 그러나 이 잡지는 제본된 발간물의 형태로 보존되어 있지 못하고 당시 필자들이 건넨 종이의 형태와 인쇄된 종이의 혼합된 형태로 묶여져 있다. 그러므로 이후 발간되어 나온 잡지보다 파손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복원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들 정기간행물들은 현재 주로 몇 호씩 합본되어 보관되고 있어 각 단체들이 발간한 다른 유형의 문서들 보다 보존과 관심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정기간행물 외에 여성단체에서 생산해낸 자료들은 각 여성단체들마다 자료 보관을 위한 자료의 분류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식의 파일명을 갖고 분류, 철되

어 있다.

1. 회의록
2. 정기총회 보고서(예산, 결산, 사업계획서 및 내용 등 포함)
3. 공문서 관계철(여성단체는 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의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받았으므로 이와 관련된 문서 다수 포함)
4. 발송 및 수신 문서철
5. 업무 및 상담일지(금전출납부 겸용이 많음)
6. 행사관계철(5주년, 10주년 행사 및 자체 행사 등)
7. 회원카드 목록
8. 간부 및 임원의 이력서 그리고 이·취임 관련 서류철
9. 행사관련 앨범 및 비디오 테이프
10. 관련 사업 관계철(탁아소, 놀이방, 주부 교실 등의 운영 사업 등)
11. 기타

이와 같이 분류되는 단체들의 자료를 단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 7> 여성단체에서 생산해 낸 자료

단체	발간물의 유형	비고
YWCA	교육, 자료집, 조사연구보고서, 문서(회의록 등)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문서(건의문-가족법개정과 관련) 대한민국 민법 친족상담편 요강 문서(진정서-민법 중 친족상속편 제정에 관한 건)	이들 문서는 1952년 조직된 여성문제연구회 문건과도 관련
한국부인회	여성지도자 강화집(단행본) 보고서 및 회의록	
한국여학사협회	정기총회보고서 및 경과보고서 회의록	
대한적십자사 (부녀봉사대)	부녀사업 서류 월례회 보고서	

각 여성단체들이 생산해낸 문서를 포함한 각종 자료들 중 일반 열람이 가능한 것은 회의록, 개인정보라 할 수 있는 회원의 주민번호 등이 포함된 회원카드 목록, 이력서 등을 제외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각 단체들은 예·결산 등 재정상태와 관련된 사항들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다.

각 여성 단체들의 기록물 보존 현황은 정부 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비교하면 더 열악한 상황이다. 단체의 활동과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은 창고나 사무실 한편에 쌓여 있다. 그리고 후에 이사나 창고 등의 대대적인 청소와 같은 행사 때 많이 유실되거나 상자에 넣어 놓은 상태 그대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장소의 협소함 때문에 오는 다른 활동의 공간을 확보한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서도 이들 자료들은 망실, 유실되거나 적극적으로 폐기되기도 하여 그 보존 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여성단체의 자료 보존 환경 및 관리 실태는 한마디로 매우 열악하여 기록물들의 지속적인 보존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단체들은 단체 관련 기록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도 협소하고, 그러한 공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보존환경이 문서 및 발간물들의 장기적 보존에는 적합지 않은 습도와 햇빛, 먼지 등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재 여성단체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체 생산 자료들은 그대로 방치된다면 조만간 유실되거나 망실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단체 중 자료 보관을 위한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가정법률상담소를 포함하여 1-2곳에 지나지 않는다. 자료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전문적인 관리담당자도 거의 없는 실정

이다. 현재 여성단체들의 자료 관리는 대체로 각 단체의 정보·홍보 담당자들이 맡고 있다. 그런데 이들 자료 관리 담당자들의 관심사는 예전시기의 자료들 보다는 현재 간행되어 나오는 발간물에 있다. 이것은 회원들의 관심사가 과거 보다는 현재 활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기록물들은 단체의 10년, 50년사 등과 같은 단체 활동사, 단체의 역사를 서술할 경우에만 주목을 받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것도 이러한 행사가 지나고 나면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리고 발간된 단체사에 단체의 모든 중요한 문건 및 활동사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오히려 이전의 자료들에 대해 더욱 무관심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만들어진 단체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담당자의 부재로 인해 단체의 역사라 할 수 있는 기록물들이 한곳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여러 담당자들의 캐비닛이나 책꽂이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방치되어 있는 자료들은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발간물에 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 밀려난다. 그러다 유실되거나 없어지는 예가 많다. 오히려 오래된 자료들은 오래되었다고 귀히 보존, 관심을 기울이는데 반해 최근 문서는 그 관심의 정도가 낮아 어느 순간부터 단체 문건이 방치되다가 유실 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 조사한 여성단체들의 자료보존 실태는 매우 심각하여 그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4. 여성사 관련 자료의 보존 방안

4.1 여성관련 자료 수집 및 관리담당 기관의 설치

여성사 관련 사료의 체계적 보존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이르지 않다. 특히 여성정책전담기구가 발족하고 각종 법률이 제정되는 등 대한민국의 여성정책이 제모습을 갖추어가는 지금이야말로 여성정책의 기원과 과정을 역사적으로 점검하여 미래의 구체적인 전략과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여성정책 및 여성단체 활동의 뿌리와 흐름을 정리하여 이와 관련 있는 여러 증거물인 사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보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

혹자는 가장 바람직한 사료 관리 방식은 “남아있는 것”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가치를 갖는 자료를 미리 선별하여 확보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것은 “남아 있는” 사료로 재구성하는 역사는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현존하는 여성사 관련 자료는 극히 소량이기 때문에 여성사 관련 자료의 체계적 수집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 수집된 자료의 관리를 위한 여성사 자료 담당 관리부서가 설치, 여성사관련 자료의 수집 및 보존을 전담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전담기관의 설치야말로 소멸되어 가는 자료 수집, 발굴에 있어 그 무

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여성사 관련 자료의 수집과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성정책 관련 자료를 총괄하는 여성사 자료 전담기구를 설치하는데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자료 수집 작업은 인력과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지 않고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나 재정확보가 수월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정책 관련 자료보다는 여성단체 관련 자료의 경우 더욱 그렇다. 현재 여성단체들은 자체 회원들의 회비가 운영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수집 및 보존 관리에 투자할 재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설립연도가 오래된 여성 단체의 자료들은 단지 여성사 관련해서 만이 아니라 당시의 정치, 사회, 경제 등 상황 파악을 위해서도 중요한 자료이며, 이와같은 귀중한 자료들은 시간이 갈수록 그 유실이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사 자료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여성사 자료 전담기구의 설치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과제이다.

이 전담 기구의 관리자는 전문 아키비스트여야 한다. 기록물관리는 역사적 시각, 행정적 식견, 정보관리 지식, 보존과학 기술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아키비스트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⁵⁾

전문 아키비스트는 유용한 기록물을 선별하고 효율적으로 보존하여 후세에 남기는 기록보존 작업의 주 책임자이다. 현재는 여성사 관련

5)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3.2.11 대통령령 제17901호] 제40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에 의거하면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검찰총장이 정하는 검찰청 소속공무원 중 행정

문서뿐 아니라 출판물에서 정기간행물 등을 포함한 기록물의 수집 작업이 선결과제이다. 그것은 앞으로 생산되는 기록물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결국 기록물의 홍수를 이루는 시대가 도래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여성사 관련 자료들 수집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에 불과하지만 이들 기록물들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조만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기록 관리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아키비스트의 확보는 효과적인 자료의 보존, 관리에 필수적이다.

4. 2 여성사 관련 자료의 DB구축

현재 여성관련 자료들은 부적절한 공간(현 문서고) 즉 기록물이 훼손되기 쉬운 보존환경(온도, 습도, 통풍, 햇빛, 곰팡이 등) 속에 방치되고 있다. 이것은 여성정책 자료보다 여성단체 자료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그러므로 보존환경의 변화가 필수적이며 영구보존문서는 대체보존 매체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때 고려될 수 있는 것이 자료의 마이크로필름화와 디지털화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중요자료를 영인본으로 제본하거나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마이크로필름 및 마이크로피시는 사진기술을 이용하여 문서, 자료 등의 기록물을 기계적으로 축소 촬영한 후 이를 보관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마이크로필름 및 마

이크로피시를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문서를 보관하는 공간을 절약할 수 있고 각종 재난이나 재해로부터 문서를 보호할 수 있으며 기밀문서를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또한 마이크로필름화와 같은 작업은 첫째 기록물 활용으로 인한 원본 훼손 방지, 둘째 원형보존이 보장되지 않은 저지질 휘발성 잉크 문서, 시청각기록물 등 중요 기록물의 대체 보존 수단 확보, 셋째 수작업으로 인한 인력 및 비용의 절감, 넷째 신속한 검색, 열람이 가능하고 기록물 보관을 위해 작은 공간 활용(김양수, 2000, 53) 등의 이점이 있다.

그리고 자료 보존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 자료의 전산화를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관이다. 즉 도서나 문서형태의 기록물의 보존은 저장의 한계와 기록의 양이 차지하는 공간의 한계에 부딪힌다. 이런 상황에서 그 보존 방법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료의 보관, 자료의 전산화 작업이다. 즉 자료의 전산화, 디지털화는 현재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자료 보존 장소의 부족현상에 대한 해결 뿐 아니라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다른 장점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의 전산화는 방대한 양의 기록물을 단시간내에 효과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며, 융통성있는 열람체제 수립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최유성 1996, 27).

이에 한국여성사 관련 자료들을 발굴, 수집,

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찰공무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인원 중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인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아닌 기록물관리기관 종사자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기록물관리기관에 보직하기 전 또는 보직 후 6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지식 정보연계활용체제에 의거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한국여성사 연구의 활성화 및 대중화를 위해 중요한 작업이다.⁶⁾ 그리고 이것은 소멸위기에 놓여 있는 국내의 한국여성사를 재생시키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자료의 디지털화 작업 및 이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단체 스스로 이 작업을 쉽게 추진시킬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여성관련 자료의 복구 및 보존의 필요성이 강조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재정을 정부나 관계 기관으로부터 확보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사학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원사료의 보존문제이다. 그러므로 자료 관리담당 기관과 자료의 전산화 작업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이 논문은 해방 이후 여성사 관련 자료의 보존현황 및 그 관리방안을 대략적으로 고찰한 것으로 여성관련 자료의 유실의 심각성을 짚어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자료 관리의 보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의

부재와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글은 여성관련 자료들의 보존 실태에 중점을 두고 서술되었으며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정책과 여성단체의 활동사 간의 관계는 밀접하다. 왜냐하면 해방 이후 미군정기부터 여성관련 부서는 여성단체를 지원하며 여성정책을 실시해나갔기 때문이다. 여성정책 관련 자료는 보건사회부, 농촌진흥청, 공보처(문화공보부), 가족계획관련 기관, 한국여성개발원, 새마을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고찰되었다. 고찰 결과 단행본, 포스터, 사진, 정기간행물 등이 보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성정책과 관련된 제1차 사료라 할 수 있는 공문서는 국가기록원에 소량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들 문건의 열람은 아직 자재와 검색 시스템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그 열람이 쉽지 않았다.

여성정책관련 자료가 많이 남아있는 곳은 대한가족계획협회이다. 협회에는 가족계획에 관한 각종 발간물과 포스터가 시대별로 잘 보존되고 있다. 여성단체활동사 관련 자료는 회의록, 업무일지, 총회보고서 및 팸플렛, 자료집, 정기간행물들이 있다. 그러나 여성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태 등의 이유로 자료 보존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자료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보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료가 없으면, 기록이 없고, 기록이 없으면 단체나, 정책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6) 이와 같은 작업은 2002년부터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즉 한국여성개발원은 한국사의 각 부문에서 활동한 여성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의 원문과, 연구논문, 보고서, 사진, 음성, 영상 등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수집하여 “한국여성사지식정보시스템”에 디지털화하여 대 국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여성사 정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곽건홍. 2001. 자료관 현황과 발전전략, 『기록보존』, 14.
- 곽건홍. 2003. 『한국국가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서울: 역사비평사.
- 권영자. 1999.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미경. 2000. 여성정책과 정부 역할의 변화. 정부와 여성참여,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기획세미나 국제포럼 발표논문집』.
- 김복규. 2000.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변화와 발전과제, 정부와 여성참여.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기획세미나 국제포럼 발표논문집』.
- 김수자. 1999. 『여성의 첫 참정권 행사 1948년 5.10 선거』,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2. 서울: 청년사.
- 김양수. 2000. 『국가기록물 보존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정부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태. 2000. 자료관의 설치 어떻게 할 것인가. 『기록보존』, 13.
- 보건사회부. 1985. 보건사회백서.
- 보건사회부. 1987. 부녀행정40년사.
- 여성문제연구회. 1977. 한국여성단체 활동에 관한 연구.
- 여성부. 2000. 여성사 전시관의 전시내용 및 기본 설계.
- 백영주 외. 2003. 『한국여성정책 관련 사료 체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여성부.
- 이경용. 2003. 한국기록관리체제 성립과정과 구조: 정부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 이경용. 2003. 한국의 현대 기록관리제도 연구: 정부수립이후 - 1969년까지 공기록을 중심으로. 『2003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행정학회.
- 전경옥. 2003. 한국여성의 정치참여와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정치참여관련 정책 부문. 『한국정치학회보』, 37(1).
- 정현주. 2004.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여성정책 연구』, 이화여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조영주. 2004. 도서관 및 기록관 자료보존 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4(1).
- 최유성. 1996. 『국가기록물 관리의 발전방안』.
- 한국여성단체연합. 1998. 열린희망. 『한국여성단체연합 10년사』.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993. 『한국여성단체협의회 30년사』.
- 행정자치부. 1999.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к с і